■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강기정-김재균 날선 공방

강 "쇄신 아닌 당권 투쟁 골몰하나" 김 "지도부 소통 부재 제역할 못해"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출마의 뜻을 밝힌 강기정 의원과 김재균 의원이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당 지도부 공천방식 등을 놓고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등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들은 12일 오후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최한 '쟁점 토론'에 참여해 민주당의 가치와 방향 등 당 개혁과 쇄신 방향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김재균 의원이 당 개혁과 쇄신에 대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대선과 총선 패배 이후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와 소통 부재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고 당내 주류 측을 공격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민주당이 시민들의 희망이 됐고, 야권연대의 중심이 됐다"면서 "그동안의 현안 투쟁을 통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등 나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근 민주당 희망쇄신연대가 당권 투쟁에 너무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당권이 아닌 민주당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김 의원이 속한 '희망 쇄신연대'를 공격했다.

시당위원장 합의 추대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달랐다.

김 의원은 "합의 추대가 좋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선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 의원은 "시당위원장 선출은 당권투쟁도 아니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대결도 아닌 만큼 가급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추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 과정에서 김 의원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의원의 공천개입설을 제기해 한때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 의원 등 지도부가 시장 경선방법으로 시민배심원제도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당원과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겼고,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2등이 공천되는 등 공천 관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만약 경선에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북을에 대한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면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이 무능력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특히 강 의원은 "당시 당의 역할을 따랐을 뿐이지, 개인적인 관여는 없었다"면서 "발언을 수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공천 관여 문제는 나중에 당원과 대의원 앞에서 토론을 통해 밝히자"고 논쟁을 매듭지었다. /최권일기자 cki@

일제, 부산서 세균무기 비밀 실험

육군 노보리토연구소 개발 소 살상용 세균 성능 검사

구(舊) 일본군 육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소를 죽이려고 만든 치명적인 세균 무기를 부산에서 비밀리에 실험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일본에서 출판된 '육군 노보리토(登戶)연구소의 진실'이라는 책 등에는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연구원이 작성한 문서인 '구(舊) 육군 제9기술연구소(노보리토연구소) 제6연구반 연구 개요'가 실려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군은 도쿄 부근에 있던 비밀병기 연구소인 노보리토연구소에서 소 살상용 세균무기를 만든 뒤 1944년 5월 부산에서 이 무기의 성능을 실험했다.

문서에는 "노보리토연구소 근처 우사에서 독성을 점검한 뒤 조선국 부산부 사하면 암남동 조선총독부 가축위생연구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전신) 서쪽에 있는 낙동강 하구의 커다란 삼각주의 일부(감천지구)를 야외 감염 실험 장소로 선정했다"라고 적혀 있다.

노보리토연구소가 개발한 것은 소와 양 등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인 우역(牛疫.rinderpest)의 독을 분리해 동결 건조한 분말 형태의 세균 무기였다. 이 무기를 풍선 폭탄에 매달아 날려보낸 뒤 터뜨려 분말을 살포하는 구조였다.

일제는 미국의 소를 대량 살상하려고 이 무기를 개발했다. 일제는 도쿄 부근 가와사키(川崎)에 있던 노보리토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분말 독을 일부러 부산에 가져와 실험했고, 이후 실제로 풍선 폭탄에 매달아 미국 본토로 띄워 보냈다.

당시 다행히도 우역이 한국에서 퍼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자칫하면 식민지 조선의 한우가 치명적인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었던 셈이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 '신세대 공동선언' 추진

양국 학계도 건의

한·일 양국 학계인사들이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양국의 미래 공동비전을 담은 '한.일 신시대 보고서'를 조만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회동해 '신시대 공동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할 경우 이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합의한 '신 한·일 파트너십 선언'보다 훨씬 큰 의미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날 "양국 학자들이 오랜기간에 걸쳐 양국의 미래 공동 비전을 연구해왔고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완성될 예정"이라며 "양국 학계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이 신시대 공동선언을 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를 좋은 의견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도 "학계로서는 당연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하영선 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는 이달 중·하순 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이를 청와대에 일본 총리실에 각각 제출하고 양국 정상이 이르면 이달말 회동해 '한·일 2010 신시대 공동선언'을 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는 오는 17일 도쿄에서 회동을 갖고 보고서 최종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도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국 정상이 회동해 이를 공동선언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박진 의원직 유지

박연차 진술 첫 부정 돈수수 벌금 80만원

'박연차 게이트' 재판에서 직접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재판부에 의해 처음으로 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있었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 중에서 '직접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다른 사건에서는 박 전 회장이 직접 돈을 준 경우 수수자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박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태명 동구청장 업무 복귀 지난달 19일부터 신병 치료를 위해 병가에 들어갔던 유태명 동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유 청장은 12일 '2010 을지연습준비보고회'에 참석해 주민 안전을 당부하고, 각 부서를 돌아보는 등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유 청장은 "원활한 구정을 위해 성심을 다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주민 편의와 동구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한나라 2중대 발언' 사과

민노 "진정성 없다" 반발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을 '한나라당 2중대'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광주시당이 12일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민노당 때문이라고 해명성 논리로 일관해 민노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강기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민주당 장병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자는 취지였으나 오병윤 후보와 민노당의 '민주당 심판론'에 대한 반론을 펴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을 불러 온 원인은 민노당의 '민주당 심판론'에 있었다"며 "민노당은 당시 선거운동 내내 '민주당을 심판하자'며 민주당을 야권연대의 대상이 아닌 네거티브 대상으로 격하시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강기정 의원, 이용섭 의원,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탈정치' 거대 공무원 노조 연내 출범한다

공노총·전국광역연맹·교육청노조 통합 추진

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통합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양대 구조를 형성할 전망이다.

12일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과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전국광역연맹),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 등에 따르면 이들 세 개 노조 위원장들은 10일 회동을 하고 연말까지 단체를 통합하기로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2월부터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으로 공노총 조합원은 4만1700명, 교육청노조는 2만3400명, 전국광역연맹은 1만600명으로 합하면 7만5700명이 된다.

전공노는 정부 통계가 잡히지 않는 옛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노조가 합해진 조직으로서 정부는 조합원을 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통계와 달리 공노총과 교육청노조, 전국광역연맹은 통합하면 11만명이 되고 전공노는 전체 조합원이 13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3개 노조 위원장은 통합노조를 기초·광역·교육·중앙 등 4개 조직으로 재편하고 세부적인 통합방식과 절차는 조만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기로 했다. 통합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와 달리 별도의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